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중의 해양경계획정

－ 스주용(史久鏞).

개요 : 본 논문은 카타르가 바레인을 고소한 사건을 예시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 판례에 대해 종합하여 논술과 분석을 한 강연과 관련 연구내용을 주제로 하였다.

1. 오늘 이렇게 해양경계획정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해당 분야의 사안 14건을 수리하였는데 이 사안들의 범위는 모두 동서유럽, 남북미주, 중동을 포괄합니다. 많은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중재법원의 판결은 법률 발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2. 이번 강연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여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2001년 3월 카타르-바레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가장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 국제법과 중재법원이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해양경계획정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우선 1982년의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강연 형식이나 논문의 형식에 따라 어미를 조정하였음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명칭은 원문을 따랐음

一. 협약에 규정된 각종 해역

‘협약’에 규정된 네 유형의 해역은 영해(육지영토와 그 안의 수역, 군도국가의 경우 군도의 수역을 포함)의 12해리 해역, 인접지대,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제외한 영역을 공해라고 하는데 공해는 심해 해저 자원개발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되어 사용될 수 있다.

二.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률의 간략한 역사

해양경계획정의 법률적 발전은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58년 이전이 첫 번

제 단계이다. 관습 국제법은 연해국의 아주 가까운 해역만을 인정했다. 즉, 영해의 주권만을 인정했다. 일부 국가는 또 그 세관, 이민, 재정, 위생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해에 인접해 있는 공해 해역까지도 주장하였다. 그 때 영해 외 해역에 행사되는 주권의 일반적 권리인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부터 1982년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때 해양경계법은 1958년 제네바협약(영해와 접경지역협약, 공해협약, 대륙붕협약, 공해생물자원보호조업협약 포함)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 단계에서 12해리의 영해와 대륙붕에 대한 국가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1982년 이후가 세 번째 단계인데 즉 이번 강연에서 주목해야 할 단계이다. ‘협약’ 체결로 영해, 인접지역, 대륙붕 외에 네 번째로 각국이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역인 배타적 경제수역이 추가되었다.

해양경계획정 법률의 발전과정에서는 두 개의 다른 경계획정의 방법이 항상 일종의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등거리선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등거리선 원칙은 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은 각 점과 해안상 가장 가까운 각 점의 거리와 대등한 중간선에 따라야 한다. 다른 방법은 등거리선 방식의 경계획정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경계획정은 공평한 결과를 위해 형평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관습법과 협약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 두 방법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三. 국제사법재판소와 해양경계획정

국제사법재판소가 카타르-바레인 사건에서 운용한 주요 절차는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련해안과 기선 식별 → 관련된 해양경계획정의 협정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필요시 등거리 및 특수사정 규칙을 적용하여 해역 경계선 설정 →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규칙으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해안이라 하였다. 또한 법원의 판례는 육지가 해양주권을 결정한다는 것이 법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해양의 주권은 연해국의 육지에 대한 주권에서 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협약 제121조 2항에는 섬이 육지와 같은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면 같은 해양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카타르-바레인사건에서 하와르(Hawar) 군도를 포함한 젠난(Jennan)섬, Qitat Jaradeh과 대륙영토의 주바라(Zubarha) 연해지역의 주권쟁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례 판결에서 주로 이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 특히 카타르와 바레인이 1971년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보호를 받았고 영국의 이 지역 영토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주바라 해안과 젠난섬의 주권은 카타르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하

와르 군도와 Qitat jaradeh의 주권은 바레인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四. 관련 해안의 기선 식별

한 국가의 해역에 대한 주권은 그 해안선의 측량을 참고하기 때문에 법원은 어떤 해양 경계획정안이든 당사국의 중첩되는 주장에서 나온 해안선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대륙붕을 포함한 도서, 소규모 섬 등의 관련 해안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일단 법원이 관련 해안을 확정하면 기선을 식별해야 하는데 기선은 각 해역의 기점을 확정한다. 아직 관련 해안의 기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거나 기선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바레인 사건에서 법원은 기점과 기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서 생길 많은 문제들에 대해 논하였다.

① 직선기선

1951년 12월 18일의 ‘영국-노르웨이 어업안’ 판결에서 기선을 긋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협약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 인정했듯이 이것이 바로 직선기선이다. 카타르-바레인 사건에서 바레인은 섬의 동쪽 해안 외에 다른 해안에 튀어나온 섬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도서들이 있으며 이 섬들은 대륙을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군도의 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 기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을 바레인이 주장한 일부 주장에 대해 받아들였으나 바레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굴곡이 있는 해안’의 일부가 아니라 일련의 군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며 영국-노르웨이 어업안과는 상황이 다르며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다르다고 하였다.

바레인은 자국을 군도국가라고도 주장하였는데 국제사법 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바레인이 협약 제47조에서 규정한 대로 직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군도국가인지의문을 표했다.

② 간조노출지

간조노출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할 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였다. 협약 13조에 따르면 간조노출지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카타르-바레인 경계획정 사례에서 어떤 간조 노출지는 총 너비가 24해리가 넘지 않아 양국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국은 각 간조노출지의 썰물선에 따라 영해너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바레인은 모든 간조노출지에 대해 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중간선을 적용할 때 바레인의 간조 노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

경계선에 있는 간조노출지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五. 이전의 협정

협약에는 양국이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계확정사건을 수리한 후 법원은 우선적으로 묵시적이든, 공식적이든 다른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많은 사례에서 협의는 매우 중요한 경계확정의 기초가 된다. (카메룬-나이지리아 대륙붕 해양경계확정안, 그린란드-얀마옌 사건)

카타르와 바레인 사례에서는 영국의 대리인이 카타르와 바레인의 당시 통치자들(부족 개념)과 1947년 양국 해안 경계를 육지 사이의 대략적인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획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카타르와 바레인은 이 획정의 구속력에 대해 모두 부정하고 있어 법원은 이에 대해 이전의 협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양국은 묵시적 협정도 없었고 이전의 협정도 없어 국제사법재판소가 경계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양국은 당시 단일경계확정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남부지역 경계확정을 할 때 카타르와 바레인은 해안선을 마주보고 있어 양국의 해안선 간의 간격이 24해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실질적으로 남부의 단일 해양경계선은 각자의 영해를 구분하는 선, 즉 각국이 가질 수 있는 영토주권의 해역을 나눈 것일 뿐이었다. 북부에서는 양국의 해안은 인접한 해안에 속하였고 법원은 각자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해역을 나누어야 했다. 양국은 이러한 해역에 대해 주권권리와 기능적인 권리만 향유하게 되었다.

六. 영해경계확정

협약 제 15조에는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권리의 원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등거리/특수사정 규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카타르-바레인 사례에서는 관습법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방법을 적용하며 가장 논리에 부합하고 가장 광범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우선 잠정 등거리선을 정하고 특수사정에 따라 고려하여 등거리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이 방법을 사용하며 등거리선을 조정할 관련된 특수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① 특수사정-작은 섬

법원은 Qitat jaradeh에 대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식물이 없고 카타르와 바레인 중간에 위치한 12m×4m의 작은 섬이나 특수 사정을 형성하여 경계확정시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잠정 등거리선을 해당 섬의 동쪽 바깥면을 바짝 지나가도록 조정하며 바레인령으로 판결하였다. 이와 반대로 카타르의 비교적 큰 켈난섬은 카타르 해안과 2.9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고려해야 할 특수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해당 섬에 전부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바레인은 Fasht al Azm에 대해 바레인 시트라(Sitrah)섬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하였고 카타르는 Fasht al Azm는 시트라섬과는 분리된 간조노출지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특수사정이라 판단하였다. 만일 Fasht al Azm가 바레인 섬을 구성하는 일부로 한다면 등거리선을 해양경계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밀물 때 해당 섬의 면적의 20%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비례에 현저히 어긋날 정도로 경계선이 과도하게 카타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 Fasht al Azm를 단순한 간조노출지로 본다면 등거리선이 이 섬을 지나가게 되어 마찬가지로 경계선으로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는 특수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Fasht al Azm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Qitat ash shajarah 사이에 경계선이 지나가도록 하였다.

② 특수사정- 해안선 지리

경계확정을 할 때 법원은 통상 등거리선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수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부 사례에서는 등거리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과의 형평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카리브해 경계확정안에서 법원은 비록 등거리선 규칙이 경계확정의 일반 규칙이라고 여겼으나 잠정경계선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사정은 평분선이라는 다른 경계확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평분선 방법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오랜 기간 형평원칙이라고 여겨진 간단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당사국 해안이 바다로 뻗어나가 중첩된 구역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카리브해 경계확정안에서 특수사정은 해안선의 지리였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육지경계의 종점은 라시아스 아디오스곶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영토였고 북에서 서남쪽으로는 또 오목한 해안선이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위치를 정할 때 등거리선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변화나 오류는 비례에 맞지 않게 방대해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많은 도서들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들 해양 지형들이 경계선의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요소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머지않은 미래에 오늘날 정해지는 등거리선이 불합리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七.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 중 각국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단일한 해양경계선을 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단일 해양경계선의 장점은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1958년 제네바협약이나 협약에서는 단일 해양경계선의 개념을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은 카타르-바레인 사건에서 “단일 해양경계획정의 개념은 다자조약법이 아닌 국가 실천에서 기인한다”며 “국가의 관할에 속하는 다양한 해역과 일부 중첩되는 해역을 국가가 끊임없이 경계선을 정하고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원 분쟁이 메인만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첩된 구역을 관할하고 서로 다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한 개의 표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기준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용은 이러한 목적 중 한 가지에 대해 혜택을 주어 다른 하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두 구역 중 다른 한 구역을 획정하는 데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대륙붕과 그 위의 해역을 동시에 구분하는 단일한 경계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게다가 법원은 메인만 사건에서 “일반국제법은 모든 인접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의 규정에 대해 경계획정을 할 수 있는데 경계획정은 형평기준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현해야 한다.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지리 구조와 기타 관련사정의 조건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결과의 형평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으로 협약 제74조와 83조 1항에 설정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형평원칙과 관련사정규칙은 단일해양경계를 나누는데 사용되며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나누는 데에도 적용된다.

① 등거리 대 형평원칙

역사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예를 들어 북해대륙붕사건, 리비아-몰타, 튀니지-리비아, 메인만 사건에서 등거리선 규칙과 형평원칙을 다르다고 언급하였는데 형평원칙은 등거리선에 경계획정의 최우선의 방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북해 대륙붕경계획정안에서 법원은 등거리선/특수사정 규칙을 사용하여 경계획정을 하는 것에 대해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 판례에서 형평원칙과 관련사정규칙에 따라 어떤 경계획정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정하기 위

해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사정과 형평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두 규칙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였다. 카타르-바레인 사례에서 “특별히 영해 경계획정에 적용하는 등거리/특수사정 규칙과 1958년 이후의 판례 법과 국가실천중 발전해온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형평원칙/관련사정규칙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또 카메룬-나이지리아 사례에서 법원은 “이 방법과 영해 획정에 적용하는 등거리/특수사정방법은 그 절차를 포함하여 매우 유사하다”며 “우선 등거리선 경계를 긋고 결과의 형평을 얻기 위해 조정 혹은 이동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고려한다는 방식이 비슷하다” 고 하였다. 이렇게 법원은 통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때 잠정 등거리선을 먼저 긋고 아 등거리선이 적합한지 먼저 고려하고 다시 반드시 선을 조정해야만 하는 혹은 극단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 고려한 후 공정한 결과를 위해 또 다른 기술적인 경계획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② 특수사정 대 관련사정

영해와 관련된 규칙을 특수사정이라고 한다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관련된 규칙을 관련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원은 그린란드-얀마옌 사례에서 양자는 같다고 하였다. 법원은 “양자가 기원상, 명칭상 다른 유형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1958년 협약 제6조의 특수사정과 관습법중의 관련사정 사이에는 일종의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 언급하며 “물론 양자의 동화는 공평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며 제6조의 규정처럼 관습법의 경향은 이미 중간선이 초보적으로 형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말일 등거리/특수사정 규칙이나 형평원칙/관련사정 규칙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이룬다면 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 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비아-몰타사례에서 법원은 “법원에게 여러 상황의 완전한 ‘리스트나 목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대륙붕 법률제도와 관련된 이유 혹은 대륙붕의 형평 원칙 적용과 관련된 이유만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륙붕의 법률 개념 자체가 도입과 성격이 다른 이유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지질 특징과 대륙붕이 관련이 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메인만 사례에서 법원은 해안지리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에 동일하게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메인만 사례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특정한 지질에 대해 다중적인 목적의 경계획정에서 적용하는 우선적인 기준을 부여하였고 이는 단일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관련사정- 해안지리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 법원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먼저 잠정 등거리선을 획정한 후 각 측이 요구하는 각종 상황에 맞춰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지를 고려하였다. 이때 해안 지리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해안의 구조와 길이, 그리고 어떤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블록 튀어나온 지역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는데 이

러한 요소들은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이 되었다.

해양 경계에서 해안 지리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은 비례 개념이다. 비례는 경계 해역에 인접해 있는 해안의 상대적 길이와 경계를 정하는 데 따른 해역의 상대적 면적이다.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법원은 비례에 대해 “형평 원칙에 따라 완성된 경계는 관련 각국 대륙붕의 범위와 그들 각각의 해안선 길이 간에 생기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례에 귀속된 해안선의 길이는 그것들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고 묘사하였다. 또 많은 사례 중 메인만 사건, 그린란드-얀마옌 사건과 리비아-몰타 사건의 경우 법원은 각 해안의 길이 비례와 잠정경계선을 각 측에 배분하는 해역의 비례를 비교함으로써 잠정 등거리선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비례는 해양경계획정에서 공평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검증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즉 비례를 이루지 않는 요소에 대한 검증이다.

카타르-바레인 사례에서 카타르는 긴 해안선을 주장하며 잠정 등거리선 조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하위 섬이 바레인에 귀속된다는 판결을 고려하여 각 측 해안의 길이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해안 지리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해안선 구조이다. 예를 들어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중간에 있는 독일 해안 오목한 부분의 성질에 대해 관련된 사정이라고 하며 오목한 해안의 다른 점에 등거리선 두 개를 그려본 후, 휘는 것이 분명하면 필연적으로 해안에서 짧은 거리에서 교차하게 되어 그것들에 둘러싸인 대륙붕이 대략 꼭지점 바다의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고 연방공화국의 지적처럼 이 삼각형과 멀리 떨어진 대륙붕의 구역으로 절연되게 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각국의 해안선이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카타르와 바레인 사례에서 해안선 구조는 관련사정으로 본다고 하였다. 법원은 Fasht al jarim이라는 바레인의 방대한 간조노출지에 대해 바레인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만조시 노출되는 해안 면적이 극히 적어 해양경계획정시 이 섬을 반영하면 비례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 간조노출지의 존재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등거리선을 측량하였다.

④ 기타 다른 사정

카타르-바레인 사례에서 바레인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잠정등거리선의 카타르쪽 진주채취 해안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를 관련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바레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진주채취는 증거로 보면 전통적으로 연해 주민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권리였고 주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진주양식업은 이미 반세기 전에 중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역사적인 권리에 기초한 주장이 법원에게 받아들여져 잠정 등거리선이 조정된 적은 없었지만 역사적 권리는 인정되는 특수한 사정에 속하며 이는 ‘협약’의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에서 특별히 언급된다.

하지만 이들이 대륙붕 및 배타경제수역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후자는 1950년대까지 공해(公海)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린란드-얀마옌 사건에서는 ‘주민에 의한 다양한 어업에 대한 전통적인 특징’이 최종 경계선 획정에서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이 수리한 해양경계획정안에서 각국은 여러 기타 관련사정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강연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해보면 어업, 석유 및 지하자원매장광물, 석유평화권, 유정, 사회경제적 요소, 안보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원은 사회경제적 요소와 유정, 석유평화권은 경계선을 조정해야 할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八. 경계획정의 기점과 종점

해안과 인접한 해양 경계획정의 기점은 일반적으로 양국 간 간조시의 육지 경계에 있다. 그러나 육지 종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바다를 향해 멀지 않은 거리에 해양 경계를 정립한 기점(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사례 310단 참조)을 정해 놓고 있다. 육지 종점의 확정 문제는 관련국들이 외교로 해결하도록 남겨 둔다.

해안으로 향하는 경계는 되도록 두 개의 종점이 있도록 정해야 한다. 종점에 관해 법원의 주요 관행은 200해리까지의 단일 해양 경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제3국까지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제 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법원은 판례에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경계획정의 종점을 정하지 않고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그 선의 연결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3국과 협상을 할 때 해당 지역에는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경계획정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3국이 주장한 경계선으로 해당 선을 자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흠결이 있는데 법원관할권에 속하는 결정을 제3국이 한다는 점과 제3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九.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 판례는 변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괄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통일된 주요 절차를 수립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먼저 해양경계획정에서 해당 해역이나 대륙붕의 일부지역이라도 어떤 정식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합의나 협정이 있었는지를 대상으로 고려한다. 만약 있으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경계획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다음 법원은 관련 해안과 잠정 등거리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을 확정해야 한

다. 기점의 선택은 전적으로 법률에 기초해야 하고, 그 선택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요소는 다음의 단계에서 처리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법원은 잠정 등거리선 하나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특수/관련 사정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다음 이 잠정 등거리선(또는 다른 선)을 확정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등거리선(또는 다른 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해안지리와 관련된 경우(특히 해안선 길이, 해안선 모양, 섬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또 법원은 역사적 권리, 사회경제적 상황, 자연자원의 배분, 안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비례 검증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정된 경계획정 선이 공평한지 혹은 공평하지 않다면 필요한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경계획정의 기점과 종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